

# ‘조선 잡아라’ 원내대표 후보들 물밑 각축

민주 경선 후보 등록 D-3...68명 표심이 당락 좌우

당선자들에 축전 보내며 러브콜...강점 어필하며 공략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나흘 앞둔 23일 물밑 선거운동을 본격화 했다. 이들 후보군은 광주·전남지역 18명의 당선자들에게도 축하 화환이나 축전을 통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내 활동 전반에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 과정에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안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해철 의원은 총선 이후 조선 당선인 전 원에게 꽃바구니를 보내 당선 축하 인사를 했다. 김태년 의원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스킨십에 나섰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부터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돌리기 시작했다. 노용래 의원과 박완주 의원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당선인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경선 도전자들은 특히 조선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68명에 이르는 조선 의원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전자들은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 조선들을 설득 중이다.

친문인 김태년 의원은 ‘정책위의장’ 등 경험을 통한 유능한 원내대표’를 내세우고 있고, 역시 친문(친문재인)인 전해철 의원은 ‘강한 여당을 이끌 원활한 당정정 소통

의 책임자’를 강조 중이다.

비문(비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모두 ‘친문 일색’일 경우 당의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야당과 ‘대화가 가능한’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있다.

일부 도전자들은 조선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 중이다. 조선이 많아 당직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보들은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 등의 자리로 ‘당근’을 제시하며 조선들의 마음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경선 이후 치러질 국회의장 후보 경선 도전자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6선으로 의장 후보 경선 출마를 굳힌 박병석 의원은 조선 당선인들

에게 당선 축하와 상임위원회 신청 및 준비 절차, 의원연구단체, 보좌진 구성, 후원회와 정치자금 등에 대한 조언을 손편지로 써서 보냈다.

한편 광주·전남 당선자들의 지지세는 분산되고 있는 알려졌다.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원내대표 출마자들과 이 지역 당선자 간 친분이 분명해 특정후보에 대한 전략적 선택은 힘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전해철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시가 급한데...통합당 ‘재난지원금 기부안’ 또 테클

당정 합의안 제시에 “수정 예산안 가져오라” 추경 심사 거부 문 의장, 여야 합의 촉구...극적 합의시 이달내 처리 가능성

여야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내용의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미래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지만 통합당은 먼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통합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라며 압박을 이어갔고,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 방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운영 방식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여야의 팽팽 게임이 계속되며 4월 임시 국회 일정도 지연되자 문화상 국회의장은 당장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리라며 조속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2차 추경안뿐 아니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입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시간을 끌수록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는 만큼 양측의 합력투기가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 합의안이 마련된 것을 고리 삼아 통합당에 예산 심사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을 비판하는 동시에 심의에 착수하려면 일단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정 안에 대해 “협찬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 상태인 데다 당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논의에 관심이 쏠려있어 상대적으로 추경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 의장은 여야 공방전이 장기화하자 직접 메시지를 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며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고 의사 일정에 합의하길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양당 원내지도부는 접촉을 이어가며 추경안 심사 및 본회의 일정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방전이 이어지며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다. 29일을 넘기면 휴일과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면서 5월 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2차 추경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인 만큼 통합당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당정 합의안에 동의하기만 하면 4월 내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 부산시장 재·보궐 여야 중진들 물망

오거돈 시장 성추문 사퇴...김영춘·김세연 등 거론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1년 뒤 치러질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복수의 여야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보선 후보로는 우선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3선 김영춘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서 16·17대 의원을 지냈고, 19대 때 부산 진갑에서 한 차례 낙선한 뒤 20대 때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이번 4·15 총선에서 부산 진갑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접전을 벌인 끝에 3.49% 포인트 차로 패했다.

통합당이 압승한 부산 지역 중 유일하게 생환해 존재감을 보인 전재수(북강서갑)·박재호(남구을)·최인호(사하갑)

의원들도 자연스럽게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 지역 세력을 확장한 통합당은 후보군이 두텁다. 불출마자 중에서는 3선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는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을 당시부터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왔다.

부산 동래에서 3선을 한 이진복 의원 역시 중량감 있게 거론된다. 이번 총선에 역시 불출마한 이 의원은 총선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4선 후 불출마한 김경훈 의원(부산 남구갑) 역시 가능성이 언급된다. 5선이 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낙선에 대한 설욕을 다짐하고 있어 출마의 문이 열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진다. /연합뉴스

## 정 총리 “기재부, 국민에 혼란 주지 말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불만 기류에 경고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당정 방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정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해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당정청 간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기재부 일각에서 불만이 새어나오는 것에 대한 ‘기장 다잡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김영수 공보실장 명의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총리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간 조율안을 발표한 직후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받아들일 것이다”는 입장을 냈지만, 기재부 내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정 총리가 항명 기류 조기 차단과 확실한 교통신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시·도지사협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국가 부담 공동 촉구문

전국 시도지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23일 17개 시·도지사 명의로 긴급재난지원금 공동 촉구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전액 국

비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가재난 상황인 만큼 지방비 부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17개 시·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소득 보전을 위해 3조원 이상 재원을 확보해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비 매칭 없는 전액 국비 지원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